

철도노조 “준법투쟁 이어 총파업 하겠다”...정부재압박

서울역에서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 선포식 예정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관철 목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했던대로 준법투쟁과 총파업을 벌일 태세다. 21일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서울역에서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를 지켜보면

서 다음달 2일 총파업할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수개월 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나 정부와 철도공사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들으려고도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정부와 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12월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만 4명의 철도노동자가 직무 중 사망했지만 국토부는 노동조합 탓, 현장 탓으로 돌리고 공사는 예산과 권한을 핑계로 뒷전인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기재부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업포를 놓고 국토부는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유지보수와 관계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규탄하는 등 지속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파업을 예고해왔다.

서선욱기자



검찰, ‘사업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前보좌관 소환

자택 3억원대 현금다발 출처도 수사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노 의원의 전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A씨를 소환했다. A씨 소환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 주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을 당시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노 의원의 자금 수수 시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과 그 직후이기 때문에 A씨

가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노 의원은 박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씨는 이장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대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심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최이슬기자

신안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신안 어업협정선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40.7km해상에서 155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다. 중국어선은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중국어선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압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제한 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150t급 중국어선 B호를 나포했다. B호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규정된 망목내경 50mm보다 총총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펜션서 잠자던 선배 부인 성폭행한 30대 징역

법원 “책임 회피·피해자에 책임 전가, 엄중처벌 불가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여행 중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펜션에서 잠자던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9일 오전 4시 20분께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

가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요소수 주입 않고 주행토록 차량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 등 적발

정비업자·화물차주 등 110명 검찰 불구속 송치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아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조작한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씨 등 1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해 9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화물차의 ECU 프로그램을 조작해 화물차에 요소수가 사용되지 않거나, 적게 사용토록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등 경유(디젤) 차량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많아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해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필수지만, 이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화물차주들은 요소수 품귀 현상을 거치면서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아도 차량운행

이 가능토록 A씨 등 정비업자에게 돈을 주고 차량을 개조시켰다. 경찰에 적발된 화물차주는 모두 110명으로, 이들이 정비업자들에게 건넨 돈은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비업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뉴스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